

6.2.경기연대 도(시)민후보 선정안

이해영1)

I. 정세

○ 진보개혁적인 ‘도(시)민후보’ 선정/공천과 지지를 통해 경기도정의 전면개혁을 도모함

○ 현재, 도지사, 108명 도의원(+ 11개 비례, 2006년기준) 전원, 31개 시장·군수중 29개, 교육위원 대다수, 총 364명 구시군 기초의원(+ 53개 비례)가운데 70%이상을 특정당이 싹쓸이 하고 있는 수준

○ **현단계 한국의 지방자치: 지역토호 이익 보장을 위한 ‘위원회’, 건설귀족의 놀이터, 지방 자치의 심각한 ‘사유화’, 뿔뿔리민주주의의 본원적 기능의 망실**

○ 지방자치 개혁의 긴급한 과제가 제기됨. 그럼에도 지방자치 개혁보다는 오로지 흥미위주 인물선거로 6.2 지방선거가 경도되고 있음. 정책이슈로는 세종시가 유일하다시피함. 그것도 여야, 보수/진보 대결구도가 아닌 현재권력/미래권력 곧 **李 대 朴, 與 내 신주류 대 구주류간**의 권력투쟁의 양상. 야당을 비롯하여 진보개혁진영 그 어디도 세종시문제에 대해 규정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反MB=MB심판론만의 상황규정력도 미지수, 현재의 조건이 지속된다면 증발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함.

○ 민주대연합론 對 진보대연합론: 결국 민주당과의 관계설정이 본질, “+ 민주당” 또는 “- 민주당”이 핵심쟁점, 선거이후의 정치적 과실에 대한 배분의 문제

○ 그러나 이 논리가 과연 경기도내 530개 선거구역(읍,면,동)의 구체적 현실속에서 ‘연역’된 논리인지는 대단히 의문. 대부분 우리 운동사에서 후천적으로 습득된 관점 및 입장의 관성적 표현, 다시 말해 구체적 현실로부터 연역된 논리가 아니라, 기존 입장과 관점으로부터 ‘귀납’된 논리, 지역의 구체적 현실에 대한 탄탄한 그 어떤 경험적 연구나 조사도 없이 기존 관성의 연장에서 ‘논리를 위한 논리’가 대부분. 경기도내 31개 시장, 군수등, 108개 선출직 도의원, 364개 선출직 기초의원 중 이른바 ‘진보대연합’을 통해 몇 석을 건질 수 있고, 또 ‘민주대연합’을 통해 과연 10%라도 확보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고민은 처음부터 없이, 대부분 언론플레이를 통한 말만들기에 주력해 옴

○ 철저히 중앙 중심으로 진행된 5+4테이블을 보더라도, 그 4란 것이 사실상 누구인지, 그 테이블에 나와도 되는 것인지, 검증은 거친 것인지 의문. 여전히 통합과 연합을 입으로 말하면서도, 실제 몸은 그렇지 않음을 보여줌

○ 경기연대의 접근은 이와는 분명 달라야 함

1) 경기희망교육연대 상임운영위원장

- 지역의 구체적 현실에서 출발하는 **상향식(bottom-up)**을 지향해야 함
- 스스로 통합하고 연대하면서 그 동심원을 확산시키는 방식을 지향해야 함
- 시민사회 역시 그저 거래 중개만 하고 구전쟁기는 ‘착한 복덕방아저씨’가 아니라, 스스로 책임있는 주체로 나서야 함

○ 현재 경기도 시민사회의 경우 일단 통합적 구심틀을 구성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그러나 이제부터 ‘실력’을 어떻게 극대화할지가 과제. 핵심과제는 Two-Track, 곧 정책과 후보로 나뉘어 짐

○ 정책은 다시, 경제(발전전략, ‘성장’, 투자, 경기남북간의 지역균형 등), 실업, 교육, 복지, 여성, 환경, 외교(통상, 통일), 행정(교통등) 등으로 나뉘어 짐. 시민사회의 경우 교육, 복지, 여성, 환경등 이른바 연성이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추. 그러나 특히 경제정책등 **경성이슈에 대해서는 거의 속수무책**. 이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한국 시민사회의 구조적 한계이기도 함. 특히 지역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전략을 세우는 과제가 말로 MB노믹스의 진정한 극복과 나아가 새로운 대안세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필수적인 단계임

II. ‘연합정치’

II.1. 연합정치의 모형

○ 이른바 ‘One-Size-Fits-All’식의 접근은 전혀 가능하지 않음. 왜냐 하면 31개 시군구 지역의 조직수준과 결의수준이 천차만별이고 그 지향점도 서로 판이함. 예컨대 기초선거에서 민주대연합 구도를 적용했을 때 혹 성과가 있는 지역도 있겠고, 아예 전망이 없는 지역도 있음

○ 현실적으로 가능한 민주당과의 ‘연합정치’의 경우의 수는

(1) 민주당후보 비판적 지지

<사례1> 지난 DJ, 노무현 정권

(2) 진보개혁진영 독자후보, 민주당 독자후보

-이 경우 ‘뭉쳐야 산다’식의 접근 아니면 둘 다 망한다식의 관점은 적어도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경험적으로 타당하지 않음

<사례2> 지난 안산 보궐선거의 경우, 진보대연합후보인 임종인후보와 민주당의 김영환후보의 후보단일화는 실패로 귀결 (민주당이 민주대연합하지 않고도 승리한 경우)

<사례3> 수원 장안의 경우 아예 진보, 민주대연합 논의조차 제대로 없었고, 민주노동당 후보가 완주했음에도 민주당이 승리한 경우, 진보진영 독자후보 전술이 실패한 경우(진보세력이 캐스팅보트를 쥐는데 실패한 경우)

(3) 민주당+ 진보개혁진영 공동후보

<사례4> 지난 교육감 선거의 경우, 정당추천이 금지되어 있기에 가능했음. 사실상 민주당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로서 공동후보의 사례라 할 수 있음. 유일한 성공사례이기에 소위 연합정치의 유일한 경험적 증거임

이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 ① ‘무조건 뭉쳐야 산다’는 식의 주장이 경험적으로 반드시 지지되는 것은 아니다
- ② 시민사회진영을 포함 제 진보정당들의 실력이 민주당의 낙선을 초래할 만큼 위협적일 때 비민주당 진보개혁세력의 협상력이 극대화된다

○ 현재의 조건에서 볼 때, 도지사, 경기도 31개 시군 단체장, 108개 도의원, 364개 기초의원 모두에 진보개혁세력이 후보를 세울 수 있을 지는 회의적, 민주당의 경우 거의 모든 지역에서 후보를 낼 것임. 이 경우 비판적 지지 전술을 구사할 수 있을 것임. 단 반드시 정책공조를 전제로 해야 함

○ 민주당이 후보를 낼 수 없거나 매우 약세이고 흠결이 있고 반면 진보개혁진영의 후보가 경쟁력이 있는 경우, 시민사회를 비롯한 진보정당에 후보를 양보해야 함(*실제 그 사례는 많지 않을 것임)

- 민주당후보와 진보개혁진영후보가 서로 경합적일 경우, 2가지 상황이 가능
- 단일화협상 타결시, 어느 한 후보로 ‘공동 정부’를 구성하고 정책공조
 - 단일화협상 결렬시,各自圖生후 승패는 알 수 없음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

○ 현실적으로 경기지역 시민사회가 case by case 식으로 위에서 살펴본 이 모든 경우를 통제하고 중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현실적 판단을 해야 함.

II.2. 공동선대본/공동도(시) 정부 구상

○ 따라서 현재의 주객관적 조건을 총체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시민사회와 진보개혁진영에게 가장 실익이 크고 명분상 정당한 대안을 찾아야 함.

- 이는 진정 **새롭고 대담한 그리고 전략적 접근**을 요구하는 것임.
- 단지 ‘참가상’을 받기 위해 시민사회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와 개혁을 위한 것이라면 필승전략을 구사해야 함.
- 민주당을 포함한 모든 정파, 세력에 대해 전 민주개혁진보세력을 아우르는 <경기지방선거 **공동후보/공동 도(시)정부구상**>을 제안할 필요가 있음.
- 현실적으로 각 정파별 후보선정이 종료된 다음에 이를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렵고, 정파별 후보단일화협상 역시 상당한 후유증이 수반될 것임.
- 따라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새롭게 변화된 모습과 그 진정성을 드러낼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긴요함

- 다음 지방선거가 2014년에 예정되어 있고, 2012년 대권/의회권력의 향방이 불투명하다고 할 때, 오히려 2010지방선거가 민주당과 비민주당 진보 정당‘들’ 그리고 시민사회진영이 총연대할 수 있는 기회로 보임. 만에 하나 2012년에 혹 민주당이 재집권한다고 하더라도 그 속성상 지방자치의 개혁에 성의있게 착수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쉽지 않음. 6.2. 지방선거의 경우 정권심판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정권견제론이 먹힐 가능성이 높아 보임. 따라서 진보개혁세력이 지역에 교두보를 확보할 의미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음.
- 타이밍이 매우 중요. 현재로선 **3월 3일 정식출범에 맞춰** 지역의 모든 정당들에게 공동후보/공동정부안을 제기
- 이는 지방선거사상 그리고 전국 어느 지역에서도 시도해 보지 않은 진정 혁신적이고 승리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서울지역의 5+4로는 제대로 된 연대가 될 것으로 보이지 않음. 혁신적인 새로운 전형을 창출해야 함.

○ 최대 핵심은 도지사선거

- 민주당으로서는 진보진영에 교육감을 내주고 도지사를 요구할 가능성이 없지 않으나 수용하기 어려움
- 도정부는 공동정부(연립정부, 연대정부, 연정coalition)를 목표로 해야 함
- 경기지역이 갖는 상징성을 감안할 때 MB정치의 사실상 견제 뿐만 아니라 이 번 지방선거의 목표인 도정 전면개혁을 위해 도정권은 필수
- 공동정부는 사전에 <연정계약 (Koalitionsvertrag, coalition contract)> 혹은 <공동정부협약>을 체결해야 함, 여기에는 각 정파의 정책조화, 자리배분, 공동정부 운영방식등이 명시되어야 함

III. 도(시)민후보 공천안

○ 아래는 지난 교육감 선거 경험을 주로 고려한 것임

- (1) 2010.3.3 - 2010.3월말 : 도(시)민공천단(100인 내외) 구성
 - 선정기준 합의 (도덕성, 능력 등)
 - 선정절차 합의
- (2) - 2010.4월 말
 - 도(시)민후보공천단, 후보 발굴, 추천 또는 모집
 - 후보 심사
 - 후보 선정/발표
- (3) 2010. 5월 초 - 2010. 6.2.: 후보단일화 및 도(시)민 후보 지지

○ 3월3일 경기연대 출범과 더불어 경기지방선거 5+1 시동

- 진보개혁진영 공동(연합)후보 공천을 위한 지속적인 간담회 (현실적으로 4월말-5월초까지 예상)
- 광역, 기초 의원 연합공천작업: 4월 중순까지 마무리
- 시, 군등 광역단체장 연합공천: 4월 중순까지 마무리